

새만금 사업 어떻게 풀 것인가

주용기

들어가며

새만금 간척사업은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일대의 갯벌을 매립하여 농지를 조성하려는 대규모 간척사업이다. 개발 면적이 토지조성 28,300ha, 담수호 11,800ha 등 총 40,100ha로서 여의도 면적의 140배 규모에 달하는 거대한 사업인 것이다. 사업기간은 1991년에서 2011년까지이며 주요 시설로 방조제 33km, 배수갑문 2개소 656m에 이른다. 2006년 3월 방조제 공사가 완공 예정이지만, 공사기간은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간척 결과가 환경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역시 무척 크고, 이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도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지역의 주민들과 환경운동 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새만금 갯벌이 지역, 나아가 지구 환경에서 차지하는 소중한 역할을 이유로 간척사업을 반대해 왔다.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국내외 개인, 단체들도 모두 한 목소리로 새만금 갯벌의 보존을 주장해 왔다. 반면에 간척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농림부, 농업기반공사, 전북 지자체 등 사업추진 측은 농지 감소와

식량 자급도 하락, 기상이변, 국제 쌀 시장의 취약성, 그리고 통일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새로운 농지확보를 위한 간척사업은 시급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이 글에서는 현재 방조제 전진공사 잠정 중단 결정이 내려진 시점에서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싼 그동안의 논쟁 중에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아울러 다양하게 제기하고 있는 대안론을 소개하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새만금 사업의 쟁점별 찬·반 논리 비교

1. 새만금 사업 추진배경과 진행의 문제

새만금 사업의 추진배경과 관련해서 식량확보를 위한 농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사업추진 측의 주장과, 경제적 요인보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추진되어 그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환경단체 측 주장으로 구분된다. 또한 현재까지 진행된 공사상황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농림부등 사업추진 측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60년대 말 남부지역의 극심한 한발과 1970년대 초 세계적인 식량파동을 겪으면서 대규모 식량기지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 사업의 시발이라는 주장이다. 그리하여 1970년대 초 전국적인 간척 예정지를 조사하여 서남해안 간척농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새만금도 서남해안 간척농지 조성 예정지로 선정되어 1971년 옥서지구 대단위 농업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추진하기로 계획되었다. 그 이후 1980년 냉해로 인한 대량 외미 도입사태를 계기로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게 된 것이다.

그후 새만금 사업은 1980년대 중반부터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경제적 타당성 분석, 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 관련절차를 거쳐 28,300ha의 우량농지를 확보하기 위해 1991년 11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농림부에 따르면 새만금 사업이 추진된 이래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전

체 22만ha의 농지가 도로, 주택, 산업용지 등으로 없어졌고, 새만금 사업이 마무리되는 2012년까지 그 정도의 농지가 또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새만금 사업을 통한 농지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사업 진행에 대해서 사업추진 측의 주장은 새만금 방조제 공사비 1조 9,418억 원 중 2003년 말까지 공사비 1조 5,958억 원(보상비 4,520억 원 포함)을 투입하고, 방조제 33km중 30.3km의 물막이가 완료되어 현재 2.7km만 남겨둔 상태로 방조제공정의 82%가 이미 완료되었는 것이다. 또한 2006년 초까지 2.7km 개방구간을 통해 해수를 유통시키면서 돌쌓기와 흙붙임, 도로포장 등 보수공사와 배수갑문 공사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배수갑문 공사 2개소 중에서 동진강 측의 가력배수갑문은 이미 완료되었으며, 만경강 측의 신시배수갑문은 기초콘크리트 공사 및 문짝을 제작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환경운동연합, 부안 지역인사로 구성된 '새만금 사업을 반대하는 부안사람들'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환경단체들은 사업을 추진하는 농림부 등의 입장과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즉 그들에 따르면, 새만금 사업은 1986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13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북도민의 정서를 달래기 위해 이 지역의 대규모 간척사업을 지시하면서 추진한 사업이라는 것이다. 농수산부는 1987년 3월부터 타당성 조사를 줄속으로 실시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하였으나, 그해 말 경제기획원은 경제성이 없다는 의견을 내는 등 정부부처 간의 의견도 일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후보는 투표일 6일을 앞두고서야 새만금 사업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후 정부는 예산 반영을 하지 않는 등 추진의지를 보이지 않았는데, 1991년 7월 김대중 평민당 총재와의 영수회담에서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는 대신 중간평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타협함으로써 국회에서 200억 원의 추경예산이 통과되었다. 이후에도 새만금 사업은 1992년 대통령 선거, 1995년 도지사 선거, 1997년

대통령 선거 등 선거 때마다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왔다는 주장이다.

이들의 주장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농업을 보는 전혀 다른 관점에 기초해 있다. 이는 농림부가 2001년 새만금 사업 강행결정 당시까지도 쌀 과잉생산(2001년 1천만 석 이상 재고), 쌀 수입 전면개방 등을 숨기고 있다가, 불과 100일이 지나서 2005년까지 새만금 사업으로 얻어지는 농지의 4배 이상되는 13만ha의 농경지를 축소토록 하였고, 2003년부터는 3년간을 휴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년 ha당 300만 원씩을 보상 지급하는 휴경지 보상제도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비추어 볼 때, 정부는 간척사업을 통한 농지확보에 주력하는 정책을 펼 것이 아니라 기존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쌀 등 농산물의 수입개방을 최소화하며 농업을 국가기간 사업으로 육성하려는 근본적인 농업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의 진행도와 비용문제에 대해서도 이들은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방조제를 쌓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부를 개발하여 농지를 만드는 것이 최종 계획이다. 따라서 내부개발비 1조3,152억원이 더 필요하고, 수질개선에 드는 비용은 차치하더라도 공사는 총 사업비 대비 49%의 사업만이 진행되었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감사원 감사자료를 근거로 하여 내부개발비 3조6,600억 원, 방조제 공사비 2조2,930억 원 등이 소요되어 총사업비는 5조 9,530억 원이라는 것이다. 이 예산으로 따진다면, 총 사업 추진율은 아직 22%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2.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갯벌이 유실되지만 새로운 갯벌이 형성된다는 주장과, 곧바로 생태계를 파괴하고 새롭게 형성되는 갯벌도 이전의 갯벌과는 전혀 다르며 그 갯벌형성효과도 매우 부분적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먼저 사업추진 측은 개발과 환경보전과의 조화를 내세운다. 그 내용은 이렇다.

일반적으로 개발과 환경보전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고 상호보완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발과 환경보전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밀도가 높고, 농지가 부족한 나라에서는 부족한 농지를 보충하기 위해 새만금과 같은 간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중요한 것은 간척농지를 개발하면서, 어떻게 하면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느냐 하는 것이며, 일부에서는 새만금 사업을 환경파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간척사업은 갯벌을 농지로 바꾸는 환경전환 사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논도 갯벌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생물들의 서식처일 뿐만 아니라 수자원 함양, 홍수 방지, 공기 정화, 쾌적한 경관 제공 등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까지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 관점에 의하면, 새만금 사업은 이 시대에 우리가 갯벌을 선택하느냐, 농지를 선택하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갯벌 대신 논을 선택한다고 해서 환경을 파괴한다고 하는 주장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아울러 갯벌은 일시적으로 줄어들지만 다시 형성된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새만금 방조제 완성 20년 후에는 방조제 바깥으로 약 628ha의 신규 갯벌이 형성될 것이나, 농지는 지금 확보해 두지 않으면 우리가 필요할 때 확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생태계 파괴와 이에 대한 복원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자연은 사람들의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인간과 자연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원을 조심스럽게 현명하게 이용해야 하며,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 이익에 우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시경관과 생물다양성의 파괴에 의해 초래되는 손실은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 논문에 의하면, 새만금 갯벌이 1년에 생산하는 가치는 약 10억 달러(1조 2천억 원)에 이르는데, 이 가치에는 오염정화, 서해안 적조현상 감소, 기후조

질, 수산물의 재생산, 생물다양성의 유지, 재해방지, 휴식기능으로부터 비롯되는 재화와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근본적인 가치를 없애는 것은 결코 친환경적인 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더욱이 새만금 갯벌은 남한에 남아 있는 유일한 염하구 갯벌로서 대체 및 복원이 어렵다는 것이다. 새로 생긴다는 갯벌은 또한 사라지는 갯벌면적 28,300ha의 약 3%에 지나지 않으며, 현재의 모래갯벌이 아닌 빨갯벌로서 다양한 생물이 적응하여 서식할 수 있는 갯벌이 아니라고 사업추진 측의 논리를 비판하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방조제 물막이만으로도 방조제 안쪽은 조류시간이 2시간 이상 늦어졌고 염도도 낮아졌으며, 해안선의 만곡부에는 빨갯벌이 쌓이면서 갯벌생태계의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또한 방조제 바깥쪽 수산자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전북지역을 넘어 가까이는 칠산 앞바다, 멀리는 전라남도, 충청도 지역 등 서해안 전체에 걸쳐 나타나고 있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3. 수질오염과 해양환경문제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질영향에 대해서도 양쪽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된다. 특히 새만금으로 유입되는 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물부족 현상이라든가 만경강 수질이 바다로 방류되었을 경우 해양수질에 끼치는 영향 등에 대한 입장은 더욱 대립되어 있다.

먼저 사업추진 측의 견해를 보면, 정부는 새만금 상류, 새만금, 해양으로 나누어 수질보전대책을 마련하고, 각각 1조2천억 원, 2천억 원, 452억 원을 투입해 그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이같은 수질보전대책 이행사항은 국무조정실에 설치된 "새만금 환경대책위원회"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있고, 전라북도 역시 "수질보전대책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금강호에서 군산 앞바다로 연간 방류되는 54억 톤의 9.6%인 5.2억 톤만을 새만금호에 유입할 계획이기 때문에 금강 상

류지역의 물부족 현상은 일어나지 않으며, 금강하구둑으로부터 4km 상류의 군산지역에서 바다로 방류되는 물의 일부를 새만금호로 유입시키게 되어 있어 금강 상류지역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게 된다고 한다. 국내외적으로 물을 서로 연결해서 활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자원의 활용방안이라는 것이다.

또한 환배수로를 통해 만경강에서 흘러 온 물을 그대로 바다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침전지와 환배수로, 습지 등을 거쳐 자연정화처리 후 바다로 방류되기 때문에 수질대책 없이 그냥 흘려보내는 것보다는 인근 바다의 수질을 더 깨끗하게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환배수로는 하류 측 수질보호를 위해 미국과 일본 등 외국에서도 성공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환경단체들의 주장은 다르다. 새만금호로 유입되는 상류하천인 만경강의 수질은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고 시화호 유입하천보다도 수질이 더 나쁘다는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또한 새만금호 수질 관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약속한 조건들 중 유역총량관리제도 도입, 전주권 그린벨트 보전, 유역에 더이상의 도시나 산업개발 불용, 금강 희석수 도입, 내부개발 지내 농업 이외의 산업활동 전무, 논의 물고높이 3cm 상승시키고,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으로 농경지 시비량 30% 감축하여 총질소 46%, 총인 50% 감축, 그리고 축산분뇨의 완벽한 처리를 위해 젓소와 돼지의 분뇨를 94.5% 처리하고 한우와 닭의 분뇨는 100%처리하는 것 등은 이미 실행이 불가능해졌거나 불투명하고 비관적인 내용들이 많고 지금까지 이행된 전제조건도 아직까지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설혹 전제조건이 100% 이행된다 하더라도 새만금호의 수질은 몇 가지 한계를 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농업용수 기준 4급수를 달성한다 하더라도 부영양화가 일어나 악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또한 환경기준은 연평균 표층수의 수질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수질이 가장 나쁜 시점과 장소의 수질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추진 측은 이러한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금강호의 물을 새만금호의 회석수로 끌어가면 체류시간이 길어짐으로써 금강호의 인 농도가 높아져서 금강호뿐만 아니라 새만금호 수질 악화의 요인이 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금강호에서 바다로 방류되는 수량이 그만큼 줄게 됨으로써 해안 생태계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며, 서로 다르게 흐르던 두 강물을 뒤섞는 일은 물 더하기 물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자연의 하천은 물뿐만 아니라 그 속의 많은 생물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그래서 금강호와 새만금호의 연락수로를 건설할 경우, 금강호-새만금호 사이에 생태 교류가 일어나고 그에 따른 생태환경변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금강유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진작에 금강 물을 새만금호로 끌어가는데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부도 공학적 타당성, 사회적 수용 가능성, 외해에 미치는 환경영향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이의 실현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하고 수질에 측도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환경부는 오히려 한발 등 갈수기와 관개기가 겹치는 시기에는 금강, 동진강에서의 유입 수량이 크게 제약을 받게 될 것이므로, 만경강으로부터 유입되는 물을 모두 외해로 방류하게 되면 수심이 낮아져 수질 악화가 우려된다고 하였다. 또 평상시 외해로 배출되는 만경강 물은 습지, 저류지를 거치더라도 오염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4. 철새 도래지 등 환경 파괴의 문제

새만금 일대에는 연간 20만 마리 이상의 철새들이 머무는 철새도래지이다. 간척사업이 진행되었을 경우 철새들의 이동·서식에 대한 입장 또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철새도래지와 관련해서 사업추진 측의 주장은 간척사업으로 조성되는 농지와 호수는 철새에게 풍부한 먹이와 서식처를 제공하여 오히려 더 많은 철새가 날아든다는 것이다. 환경부에서 114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겨울철새 전국동시조사” 결과를 보면 철새의 개체수가 많은 순위로 1999년에는 1위~7위가 농업용 간척지역이고 2001년에는 10위 이내에 호수가 5개소이고 인접지역이 8개소라는 것이다. 그래서 새만금 갯벌에 찾아오는 철새들은 새만금 사업이 완공되면 천수만 등 인근의 갯벌이나 새로 생기는 갯벌로 이동하여 계속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갯벌에 주로 서식하는 도요, 물떼새류는 새만금 사업 완공시 인근(5~20km) 곰소만과 금강하구 또는 서남해안의 다른 갯벌(23만9천ha)로 이동·서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환경운동단체들의 주장에 따르면, 새만금 갯벌은 봄·가을에 시베리아와 중국 등지에서 번식하고 호주, 뉴질랜드 등 남쪽을 월동지로 이용하는 도요·물떼새류의 중간 기착지로서, 한국 최고이자 국제적으로 보기 드문 철새도래지임을 강조하고 있다. 물새류 2만 마리 이상이 도래하는 지역을 랍사습지로 지정하여 보호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랍사협약에 따르면, 새만금은 도래하는 철새의 수가 10배가 넘는 매우 중요한 습지라는 것이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1997년에 동진강 하구의 조류지와 주변 갯벌을 랍사협약에 따른 국제 도요새 네트워크 가입습지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새만금 갯벌이 간척사업으로 사라지게 되면 새만금 갯벌에서 먹이를 취하는 20만 마리가 넘는 도요·물떼새류는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새만금 지역에 도래하는 철새들의 개체 수와 생태적 특성상 다른 갯벌로 이동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생존조차 어렵다는 주장이다. 물론 간척 이후 도래하는 조류의 개체 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는 있으나 희귀 조류와 전체적인 종 다양성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방조제 공사가 중단되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는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

사업추진 측에 따르면, 오히려 방조제 공사가 중단되면서 현재의 2.7km

개방구간으로 1일 72억 m^3 의 바닷물이 드나들고 있고, 사업 전보다 바닷물 흐름속도가 4배 증가(1초당 1m→4m)된 상태로 이미 시공된 방조제의 흠과 돌, 개방구간 바닥의 들뜸태 등이 유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유실된 흠과 돌은 인근 갯벌에 불규칙하게 박혀 암초가 되어 선박사고 발생, 어장과 해수욕장 황폐화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0년 8월 프라피룬 태풍 1회에 토석 26억 원 상당(26만 m^3)이 유실되고, 지난 2년간 사업중단시 하루 2~3억씩 총 77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측은 저비용의 대책 수립을 제안하고 있다. 즉 현 단계에서 방조제 공사를 중단하더라도 방조제 개방구간 단부를 Cassion과 TTP 등으로 보강하면 적은 비용으로 방조제가 유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TTP 설치비가 1개소당 15억5천만 원, Cassion 설치비가 1개소당 17억 원으로, 단부 공사비는 대략 1개소당 32억5천만 원이며, 10곳을 건설할 경우 약 325억 원 정도의 비용이면 해결된다는 것이다.

환경단체 측에 의하면, 지난 2003년 8월경 서울행정법원이 본안 심의 중 공사의 일시 중단을 결정했을 때 농림부는 방조제 전체가 유실되어 막대한 비용이 소실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현장확인 결과, 2003년 6월경 갑작스럽게 막은 4호 방조제 물막이 구간과 2공구의 일부 하저 폭을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은 구간만이 유실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일부 유실된다 하더라도 방조제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갯벌 생태계 파괴보다 더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농림부가 방조제 전진 공사만을 무리하게 진행하였고, 이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방적인 주장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 새만금 갯벌을 현재보다 더 많이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개방구간 2.7km는 물론 최소한 방조제 4공구 중 지난 6월경 급하게 물막이가 이루어진 일정 구간을 터주고 교량으로 연결하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안을 찾아서

새만금 사업은 2003년 7월 현재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으로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방조제 공사가 2.7km 남아 있는 상황에서 여러가지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대안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새만금 사업을 중단하고, 또한 이미 진행한 사업을 활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여러 대안들 중에서 생태공원으로 조성, 풍력단지 조성, 복합산업단지로의 전환 등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다.

1. 생태공원 조성

먼저 전남대 전승수 교수 등이 주장하는 대안으로 새만금 일대의 환경을 살려 환경-관광 브랜드로 개발하자는 주장이다.

새만금 방조제는 전북의 미래인 관광-공간-항만-환경자원이며, 환경보존의 세계적 기념탑으로 거듭나게 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하구 쪽으로는 새만금 갯벌공원, 바다쪽으로는 새만금 바다공원이, 남쪽으로는 새만금 산림공원(변산)과 암석공원(체석강)이 위치하여 방조제는 이들을 서로 이어주는 교통로와 작은 관광선과 요트가 드나드는 바다 아치가 될 수 있으며, 상징적으로는 개발과 보존을 절묘하게 이어주는 살아 있는 가교로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전북도와 정부가 전 세계에 “환경보존국가”로 거듭났다는 것을 널리 공표하고 새만금의 새로운 생태보존계획과 함께 생태관광을 과감하게 홍보한다면 전 세계가 놀라 한국의 위상 제고는 물론 2002년 월드컵보다 더 많은 관광수입을 새만금에서 얻을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그는 독일의 슬레스비히-홀스타인 갯벌공원의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지난 14년 동안 매년 평균 120만 명의 관광객이 평균 10일간 체류하고 갔던 것을 예로 들고 있다. 이러한 수치를 그대로 적용할 때에 “완벽한 휴식-여유-자연환경”을 어우를 수 있는 관광개발계획을 통하여 우리도 새만금 갯

벌-바다공원에서 연간 1조 2천억 이상의 순수한 관광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새만금 하구의 자연환경 그 자체 가치가 연간 1조 2천억이므로(Costanza 등, 1997, Nature) 미래의 가치는 연간 2조 4천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새만금 갯벌공원, 바다공원, 산림공원을 잘 활용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한다면 이와 같은 수입은 새만금의 미래관광가치로 환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프랑스의 몽셀미셸만 갯벌의 한가운데에 있는 오래된 작은 성에 조수해파(tidal bore: 대조시에 강으로 밀려 들어오는 조수파) 관광을 겸해서 하루에 만 약 2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때가 1년에 수차례가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 새만금 하구에도 작지만 조수해파가 있으며 이를 잘 활용하고, 김제-부안-전주-익산의 문화를 함께 접목한다면 새만금의 미래 가치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꿈이 있는 새만금 방조제가 되기 위해서는 새만금 갯벌이 살아 있을 정도의 해수통로가 보장되어야 하며, 4공구 방조제 일부분과 아직 연결되지 않은 부분은 아치형 다리로 연결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리고 새만금과 관련이 있는 모든 어민과 농민이 공동투자를 하여 새만금 어민공동체를 구성하고 정부로부터 일부해역의 어업권을 획득하여 공동으로 운영할 것도 제안하고 있다.

2. 풍력단지 조성

새만금에 풍력단지를 조성하자는 주장은 방송통신대 이필렬 교수 등이 제안하는 대안이다. 이 대안은 방조제 공사를 현 시점에서 중단하되, 지금까지 건설된 방조제에는 대규모 풍력발전단지를 만들어 전북을 한반도의 풍력 발전 중심지로 만들자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갯벌도 살리고, 방조제도 무용지물로 만들지 않을 뿐 아니라, 전북의 발전을 환경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

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들어선 방조제 양쪽에 육상에 세우는 풍력발전기로 가장 큰 것에 속하는 1,500킬로와트(날개지름 약 70미터, 기둥높이 약 100미터)의 풍력발전기를 350미터 간격으로 세우면 한쪽에 82개씩 모두 164개의 발전기를 세울 수 있는데, 이 경우 전체 발전용량이 거의 250메가와트(25만 킬로와트)에 달하는 풍력발전소가 생겨난다는 것이다. 해양 풍력발전용으로 개발된 풍력발전기를 세우면 풍력단지의 규모는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해양풍력단지는 유럽의 덴마크, 독일, 영국, 아일랜드 등지에서 적극적으로 건설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덴마크에서는 이미 해양풍력단지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북해에 대규모 단지의 건설을 계획 중이라고 한다. 이 주장에 따르면, 3,000킬로와트급의 풍력발전기를 세울 경우, 발전기 사이의 적정한 거리는 약 500미터 가량으로 방조제 위에 약 120개 가량의 발전기를 세울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전체 발전용량이 약 360메가와트(36만 킬로와트)의 풍력발전소 규모로 웬만한 규모의 화력발전소 한 개가 생기는 셈이라는 것이다.

1,500킬로와트의 풍력발전기로 250메가와트의 풍력단지를 건설할 경우, 그 비용은 약 3,500억 원으로 지금까지 들어간 새만금 간척비용 1조5천억 원의 5분의 1 정도도 안 되며, 3,000킬로와트급 또는 2,500킬로와트급을 설치하여 360메가와트의 풍력단지를 건설할 경우에도 비용은 약 4,600억 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에 새만금 풍력단지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양은 전북 전기수요의 상당 부분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 즉 초속 6미터에서 대형 풍력발전기는 최대 발전능력의 약 22%를 내놓을 수 있는데, 22%의 가동률을 기준으로 1년간 발전량을 계산하면 1메가와트(1,000킬로와트)당 약 195만 킬로와트시의 전기가 생산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250메가와트 풍력단지의 경우 전체 발전량은 연간 약 5억 킬로와트시에 달하는데, 이 양은 가구당 연간 전기소비량을

2,500킬로와트시로 잡을 때 20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양이다. 360메가와트 풍력단지의 경우에는 전체 발전량이 연간 약 7억 킬로와트시로, 약 30만 가구에 공급될 전기가 생산될 수 있다고 한다. 인구 수십만 명의 도시를 지탱할 수 있는 전기가 새만금에서 생산된다는 것이다.

현재 전북의 전력생산시설은 군산의 6만6천 킬로와트 규모의 작은 화력발전소와 그것보다 더 작은 양수발전소밖에 없다. 대부분의 전기를 다른 지역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형편이다. 이 주장대로 새만금에 풍력단지가 건설되면 전북은 필요한 전기의 상당부분을 자체 생산하게 됨으로써 전북의 전력자립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풍력단지를 건설하는 것은 수년 안에 마칠 수 있는 일로서, 그야말로 현실적으로 확실하고, 환경친화적이면서 발전가능성이 아주 큰 미래지향적 사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새만금 간척을 중단해서 경제적 생태적 가치가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난 갯벌을 살려서 이용하고, 현재 건설되어 있는 방조제에는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면 전북지역에 큰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살려낸 갯벌은 어장으로뿐만 아니라 생태관광지로 개발하면, 전북은 풍력발전 중심지로서 간척사업을 하는 동안 얻는 이득보다 훨씬 크고 영구적인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새만금 방조제에 풍력단지를 건설하는 것은 단지 간척의 대안으로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앞으로 한국이 풍력 등의 재생가능 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하겠다는 정책적 구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만금에 풍력단지를 건설하는 일은 현재의 대립을 화해시키는 대안으로서도 가치가 있지만, 한반도의 바람직한 에너지 미래를 위해서도 선택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복합산업단지 구성

새만금 사업을 복합산업단지로 전환하자는 것은 전북대 오창환 교수 등이

주장하고 있다. 현 방조제 끝부분에 대한 마무리 공사를 한 후 방조제 사이를 교량으로 연결하고 4공구 방조제 중간하제, 군산시 하제까지 막아 윗부분을 축소된 복합단지(1,200만 평)로 10년 이내에 완성한다는 내용이다. 전북대 홍성훈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약 2조5천억 원으로 농지 조성비인 4조1,336억 원보다 적게 드는 것으로 나와 있다. 그리고 1천6백억의 차액을 새만금 신항구 건설 예산으로 변경해서 2010년경까지는 서해안시대 산업거점 후보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이 주장은 현재 완공된 방조제는 수심이 깊은 신시도 주변에 국제적 경쟁력 있는 신항구의 건설과 고군산군도와 새만금 갯벌이 어우러진 새만금 해양-생태 관광특구에 매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그리고 새만금 지역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며 경관도 수려하고 생태적 가치도 높기 때문에 청정성을 바탕으로 한 동북아의 관광-문화 거점 지역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것이다.

가능하면 간척 사업보다는 급하게 막은 4공구 물막이 구간에 다리를 건설하는 사업과 새만금 신항 건설에 우선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사업의 연속적인 추진을 위해 축소된 복합단지 개발에 대해서 우선은 농업 기반공사가 농지확보 차원에서 수년 이상을 수행한 후, 산업단지화가 필요한 부분만을 산자부로 이전하여 사업을 수행하며 예산 지원의 우선순위를 복합단지 개발보다는 연결되지 않은 방조제 사이를 다리로 연결해 주는 데 두자는 것이다. 그리고 살아 있는 갯벌을 공동채취장 및 양식장으로 제공함으로써 새만금 지역 주민의 소득과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새만금 방조제가 완전히 막히게 되면 갯벌이 죽기 때문에 이러한 발전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은 사라진다고 보고 있다.

나오며

대안을 마련할 때 새만금 갯벌의 일부를 매립하여 전북도민의 개발욕구를

채워주는 방식의 개발방안을 제시하는 현실타협적인 대안을 찾아서는 안 된다. 새만금 갯벌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여 대안을 찾지 말고 전북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새만금 사업을 찬성하는 도민들 중 전북발전을 빌미로 새만금 사업의 추진을 찬성하는 경향이 있다. 새만금 사업은 수많은 생명을 죽이고 어민의 생존권을 파괴하며 미래세대가 누려야 할 소중한 자원을 없애는 것이기에 진정한 전북 발전을 위한 사업일 수가 없다. 오히려 새만금 갯벌을 살려내어 진정한 전북 발전을 위해 가치있게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꼭 새만금 갯벌은 살려내야 한다. 오히려 전북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전북 발전을 위한 다른 대안을 제시한다면 훨씬 가치있는 일이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충분한 충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발전이 대규모 토목·건설 사업과 골프장 건설, 무분별한 산업단지형 중심의 개발방향이었던다면 이제는 다른 지역과는 차별성 있고 지속가능한 전북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독특한 발전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전북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며 전북 도민의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발전방안이어야 한다. 새만금 사업은 그동안 우리가 그러한 방향으로 시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도민들의 개발욕구의 발현이라 할 수 있다. 전북도내에서 새만금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개발로부터 많은 이익을 얻고 지역 내 기득권을 누려온 사람들이다. 이들은 도내 건설업자, 기업인, 이들과 공생하는 정치인, 언론·방송인 등 개발연합세력들이다. 그들의 논리와 이익을 대변해 주는 방식의 발전이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전북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친환경적인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NGO, 학자, 행정, 정치인 등 다양한 도민들의 합리적인 토론과 의견 수렴으로 끊임없이 수정과 보완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새만금 방조제를 무조건 헐자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귀중한 자연자산을 없애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없고 또 담수호 수질문제가 예상되므로 방조제 건설을 중단하고 해수유통을 시키자

는 것이다. 그리고 방조제는 풍력단지 등으로, 갯벌 내부는 지역어민들의 생활공동체를 회복하고 생태·문화관광지역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

갯벌 간척사업 등에 대응하는 전북지역 단체들의 활동 경과

- 1998년 1월 : 전북환경운동연합, '새만금 사업 재검토' 를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
- 1998년 3월 6일 : 환경운동연합 전국 36개 지역조직 사무국장단 '새만금종합개발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
- 1998년~1999년 : 전북환경운동연합, 새만금 갯벌에 찾아오는 도요·물떼새 조사 후 람사보고서 제출
- 1998년 10월 : 전북지역 각계 인사가 모여 "새만금간척사업 전면 재검토(백지화를 포함한)를 위한 100인 선언문" 발표
- 1999년 12월 : 부안지역의 인사들을 중심으로 '새만금 사업을 반대하는 부안사람들' 창립
- 2000년 1월 30일 : 부안 해창갯벌에서 '새만금 매항제' 개최
- 2000년 3월 15일 : '새만금 간척사업을 반대하는 부안지역 1,000인 선언문' 발표
- 2000년 3월 26일 : 부안 해창갯벌에서 '새만금 장승제' 개최
- 2000년 : 군산지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새만금 사업 즉각 중단을 위한 군산사람들' 창립
- 2000년 : 전북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새만금 사업 즉각 중단을 위한 전북사람들' 창립
- 2000년 8월 : 전주사내 객사앞 천막농성 돌입
- 2000년~2003년 매년 6월간 : 새만금 갯벌 바닷길 걷기 행사
- 2001년 5월 : 새만금 사업 즉각 중단을 위한 서울 상경 투쟁
- 2001년 5월 말 : 정부의 '새만금 사업 강행 결정 발표' 무효선언 농성 돌입 및 타임캡슐 묻기 행사
- 2002년 3월 : 계화도 내초도 주민 유종근 퇴진 요구 전북도청 앞 집회
- 2002년 4월 : 새만금 갯벌 살리기 범종교인 기도회 (시민사회단체 지역어민 참여)
- 2002년 4월 : 새만금 사업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지역어민, 종교인, 시민사회단체 대규모 집회 개최
- 2002년 6월 : 국립공원내 해창산 채석 저지를 위한 점거농성
- 2002년 11월 : 새만금 갯벌 살리기 기독교·불교·원불교·천주교 김제지역 종교인 기도회
- 2003년 3월 28일~5월 30일 : '새만금 갯벌의 온 생명과 평화를 염원하는 삼보일배' 진행
- 2003년 5월 : 군산시 비응도앞 4호 방조제 입구에서 전북지역어민, 시민사회단체 대규모 집회 개최
- 2003년 5월 : 새만금 사업 즉각 중단과 친환경적인 전북발전 대안을 촉구하는 전북지역 인사 1,633명 선언
- 2003년 6월 : 새만금 방조제 4공구 물막이 공사 현장 점거농성
- 2003년 6월 : 새만금 사업 지구내 어민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탄원서 청와대 전달
- 2003년 6월 : 해창산 위령제 개최
- 2003년 7월 : 새만금 갯벌 살리기를 위한 전북인 문화제 개최

주요기 juyki@hanmail.net | '새만금사업 즉각 중단을 위한 전북사람들'의 상임집행위원장. 1994년부터 전북환경운동연합에 상근하면서 환경운동가로 활동해 왔으며, 전북지역의 주요 환경 현안들을 다루어 왔다. 전북대 시간강사와 각종 환경 강연 및 현장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다.